"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들어서나" 불안한 영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 땐 한빛원전 내 저장 가능
주민·환경단체, 법 폐기 촉구…"영구처분장 건설 논의 공론화해야"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은 요즘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들어설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원전 내부를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혹시 임시저장소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앞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주민들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불안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태세다.

애초 사용후핵연료를 모아 영구 격리하는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폐기 및 지난 정권부터 미뤄져 온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특히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이 아닌,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같은 시설들을 마련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임시저장시설을 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발전소 가동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주민들 불만이다.

광주·전남 탈핵 단체들도 이같은 점을 감안, 25일 해당 법안 폐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책임 있는 공론 과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및 포화 전망

(단위:다발, 2021년 10월 20일 기준)

본부	호기(시설)	저장용량	현저장량	현저장율	포화예상
한빛 원자력본부	한빛1호기	2,105	1,769	84.0%	2029년
	한빛2호기	2,100	1,489	70.9%	
	한빛3호기	1,125	908	80.7%	
	한빛4호기	1,125	824	73.2%	
	한빛5호기	1,281	850	66.4%	
	한빛6호기	1,281	851	66.4%	
	소 계	9,017	6,691	74.2%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은 1986년 영광 한빛원전 한빛 1호기 첫 가동부터 6호기가 운영 중인 현재까지 원전 내부 물탱크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저장소는 현재 74.2%가 채워져 오는 2029년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폐기장(방폐장)이 없어 전국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중이다.

애초 '영구처분장' 건설 전까지 임시 저장키로 했던 방침은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40년 가까이 원전 내부에 '불안한 저장'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5년 "2051년까지 영구처분장을 건설한다"는 로드맵만 발표해놓고 문재인 정부는 백지화시킨 뒤 더이상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영광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영구 처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책 마련을 방기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42년 한빛 6호기까지 40년의 수명 만료로 멈춰 서면 영광은 원전 가동은 멈추고 사용후핵연료만 품는 지역이 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한빛원전은 2029년, 고리는 2031년, 한울(울진)은 2030년을 기점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되어 원전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불안함과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산정지구 주민들 "3기 신도시 제외해 달라"

25일 광주시청 앞 집회 열기로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주민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중인 '3기 신도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산정지구 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25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상여 등을 들고 인근 LH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광주시 아파트 보급률이 현재 107%, 향후 10년 이내 130%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끼워 넣기식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를 15km나 떨어진 장소에 조성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광주 산정지구 개발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에 광주 산정지구가 편입된 과정에서 빛 그린 산단 배후부지라는 개발 논리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광주시를 상대로 권한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며 산정지구 개발 방침이 철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육원의 유일한 통행로가 철제펜스에 가로막혀 있다.(왼쪽) 남구청이 지난 20일부터 이틀 간 통제된 입구 옆 뒷길에 마련한 임시도로. 사진 우측 상단 부분에 통행로를 가로막은 철제펜스가 보인다.

"아이들 다니는 보육원 유일한 통행로 막아버리다니…"

땅 주인이 경계선에 펜스 설치
건설사가 토지 매입 절차 추진
남구청, 임시도로 긴급 마련

"보육원 아이들과 수녀님이 사는 곳 입구를 갑자기 막으면 어떻게 돌아다니란 말인가요?"

부모의 손에서 길러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과 카톨릭 수녀 등 100여명이 생활하는 보육원의 유일한 통행로가 봉쇄되면서 자치단체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광주 남구청과 보육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시 남구 A 보육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폭 4m)에 2m 높이의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과거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됐던 해당 구간은 지난 1987년부터 보육원의 유일한 차량 통행로 역할을 해왔다. 땅 주인 B씨는 지난 1987년 땅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해당 부지를 보육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고 사용을 허락했다.

B씨는 최근 보육원 측에 "그동안 토지에 대한 무단 통행에 대해 배려했으나 진입로 신설이나 개설 대책에 소홀했다"며 "본인의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예정된 매수자의 건축허가가 나면 토지를 인도해야 하므로 귀원의 토지 경계선에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B씨는 내용증명에서 소요기간은 3개월로 예상되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했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 일대는 최근 2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건설사가 매입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 보육원 명의의 토지도 포함된 만큼 토지 매수 및 대토(교환)를 의논 중이었으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보육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 남구청은 사정을 전해들을 뒤 지난 20일 부랴부랴 김병내 남구청장 등이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했다.

남구청은 일단 보육원 아이들의 식사를 위한 식재료 차량 진입을 위해 긴급 공사를 진행, 통제된 입구 옆 뒷길에 임시도로를 마련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경찰에 교통 방해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보육원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9일 전두환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 될 듯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법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데 따라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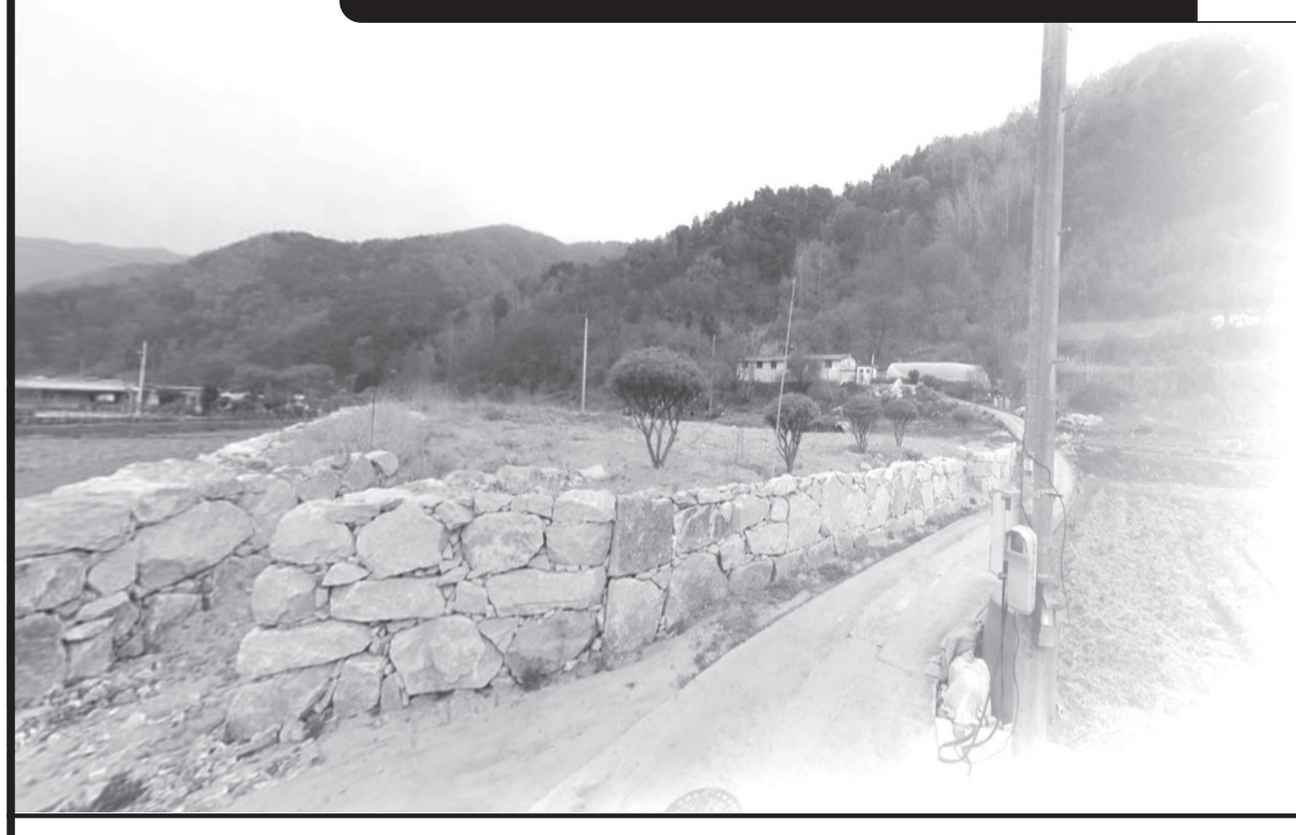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번에도 우선 배정 방청석을 38석, 일반방청석을 33석으로 축소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